



## 제3차 한·일·중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평가

정 형 곤 국제개발협력센터 동아시아경제협력팀장 연구위원 (hgjeong@kiep.go.kr, Tel: 3460-1127)

노 유 연 국제개발협력센터 동아시아경제협력팀 전문연구원 (yynoh@kiep.go.kr, Tel: 3460-1045)

1. 서론
2. 3국 정상회의 경과 및 제1~2차 회의 결과
3. 제3차 한·일·중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
4. 평가 및 향후 과제



- ▶ 2010년 5월 29~30일 이틀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그리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제3차 한·일·중 정상회의가 제주도에 개최되었음.
- ▶ 3국 정상은 ①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발전방안, ② 3국 협력 사무국 설립, ③ 신규 협력사업 발굴, ④ 최근 동북아 정세 및 국제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음.
  - 회의결과로서 △ 3국 협력 Vision 2020 △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 △ 표준협력 공동성명 △ 과학혁신 협력 강화 공동성명 등 4개 공동문서가 채택됨.
- ▶ 금번 정상회의의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을 2011년 중 한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제도화 수준이 낮았던 동북아 경제통합과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임.
  - 3국 협력 사무국 구축은 ASEAN+3 체제에서 벗어난 명실 상부한 '동북아' 지역협력체를 상징하며, 이를 바탕으로 3국 간의 주체적인 협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임.
- ▶ 2010년을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로 지정하

면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 및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,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미흡함.

-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별 실무그룹(working group)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현방법을 차기 정상회의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2011년 중 한국에 개설 예정인 3국 협력 사무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도 이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함.
- ▶ 향후 한·일·중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ASEAN+3와 EAS(East Asia Summit)이라는 두 개의 별도 협력체를 운영하는 데 소모되는 행정적 비용 및 역내 국가 간 대립을 해소하고 역내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.
- ▶ 중장기적으로 한·일·중 정상회의는 경제·금융 협력의 기능과 외교·안보 협력의 기능을 반영한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지역통합체로 발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## 1. 서론

■ 2010년 5월 29~30일 이틀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그리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제3차 한·일·중 정상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음.

- 금번 정상회담은 2010년 개최국인 한국, 차기 개최국 일본 및 차차기 개최국 중국 순서대로 '한·중·일' 이 아닌 '한·일·중 정상회담' 로 표기하기로 했음.

-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차 및 2차 회의와는 달리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틀간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.

■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①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발전방안, ② 3국 협력 사무국 설립, ③ 신규 협력사업 발굴, ④ 최근 동북아 정세 및 국제이슈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.

- 회의결과로서 △ 3국 협력 Vision 2020 △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 △ 표준협력 공동성명 △ 과학혁신 협력 강화 공동성명 등 4개 공동문서를 채택되었음.

■ 한·일·중 정상회담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동북아 지역통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협의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음.

- 또한 동북아 역내 안정과 발전뿐 아니라 동아시아 통합 논의 등 국제사회에서 3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.

■ 본고는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과 의미를 파악하고, 향후 한·일·중 3국의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.

## 2. 3국 정상회담의 경과 및 제1~2차 회의 결과

### 가. 3국 정상회담의 경과

■ 한·일·중 3국 정상회담은 1999년 마닐라 ASEAN+3 정상회담의 시 조찬을 겸한 비공식회의로 시작된 이후, 2000년 2차 회의를 계기로 정례화되었음.

- 한·일·중 3국 정상회담은 당초 ASEAN+3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느슨한 형태로 개최되었지만, 이후 「한·중·일 협력에 관한 3국 정상 공동선언」(2003) 채택되고 그 후속조치를 위한 '3자위원회'가 설치되는 등 점차 제도화·공식화가 강화되어왔음.

- 한편 2005년에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따른 역사인식문제로 회의 개최가 취소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음.

■ 2007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8차 ASEAN+3 계기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별도의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한·일·중 정상회담은 2008년부터 일·중·한 순서로 개최되기 시작함.

- 당시 새롭게 발족한 일본의 후쿠다 내각의 중국, 한국 등 주변국과의 선린외교를 중시하겠다는 내용의 의지 표명,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위기감을 배경으로 역내 국가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 제고 등의 주변환경 변화도 한·일·중 3국 정상회담의 개최를 현실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.

### 나. 제1~2차 회의 결과

■ 2008년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「한·중·일 3국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」, 「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」, 「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3국 공동발표문」, 「한·중·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」 등 네 개 문건을 채택함.

- 「한·중·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」에서는 3국 협력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,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명기하였음.

- 「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」에서는 세계 금융위기에서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하고,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경제 성장회복을 위한 국제회의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.

- 「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3국 공동발표문」에서는 포괄적 재난관리체제의 개발, 재난 취약성 감소 및 피해 최소화 시스템 개발, 다양한 수준에서의 재난관리 협력 강화 및 재난관리 분야회의의 순환 개최에 합의하였음.

- 마지막으로 「한·중·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」에서는 5개 분야에서 24개의 구체적 세부사업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음.

■ 2009년 10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「한·중·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」과 「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」 등 2개의 공동문건을 채택함.

- 「한·중·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」에서 1999년부터 시작된 3국 간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,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① 정치적 상호 신뢰 강화, ② 경제협력 심화, ③ 인적 교류 확대, ④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추구, ⑤ 국제문제에 대한 협의 강화 등 다섯 가지로 제안함.

- 「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」에서는 협력에서의 기본정신은 상호이익과 윈-윈 결과 추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녹색경제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협력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함.

- 또한 한·일·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, 「한·일·중 협력 사이버사무국」 개설, Business Summit 개최, 항공안전분야의 협력 강화, 수자원 관리방안 협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체 신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음.

### 3. 제3차 한·일·중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

■ 제3차 한·일·중 정상회의는 2010년 5월 29일(토)~30일(일) 양일간 제주에서 개최되었음.

■ 회의결과로서 3국 정상은 「3국 협력 Vision 2020」, 「3국 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」, 「표준협력 공동성명」, 「과학혁신 협력 강화 공동성명」 등 네 개의 공동문서를 채택하였음.

- 다음은 공동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상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을 ①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발전방안, ② 3국 협력 사무국 설립, ③ 신규 협력사업 발굴, ④ 최근 동북아 정세 및 국제이슈 등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임.

#### 가.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발전의 비전 및 방향 제시

■ 3국 정상은 지난 10년간 3국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, 이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발전의 비전 및 주요 실천과제를 담은 「3국 협력 VISION 2020」을 채택함.

- 이 공동문서는 크게 전문과 본문으로 나뉘는데, 전문에서는 지난 10년간 3국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, 2020년까지 3국 협력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3국 이익과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자는 내용이 포함됨.

- 본문에서는 위의 목표 달성을 위해 5개 부분에서의 41개 세부 협력과제를 제시하고 있음.

표 1. 3국 협력 VISION 2020의 부문별 주요 내용

부문	주요 내용
제1부분: 동반자적 협력관계 제도화 및 강화	① 정부 간 협의체 활용을 통한 3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 구축 ② 2011년 내 3국 협력 사무국 한국 내 설립 ③ 기존 제도 및 기관들을 활용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처 ④ '3국 국방대화' 개설 가능성 모색 ⑤ 3국 치안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 구축 ⑥ 3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
제2부분: 공동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	① 한·일·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2012년까지 완료 ② 각종 무역장벽 철폐 및 무역원활화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3국 간 교역규모 확대 ③ 한·중·일 물류장관회의 및 양자 간 물류 관련 정책대화 지속 지원 ④ 3국 간 세관협력 강화 ⑤ 한·일·중 투자협정 체결 ⑥ 3국 간 금융협력 확대 및 국제금융시스템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 ⑦ 다자무역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3국 간 협력 ⑧ 과학혁신분야 협력 강화(별도 공동성명 채택) ⑨ 표준협력 강화(별도 공동성명 채택) ⑩ 산업, 에너지, ICT, 문화사업 등 기타 분야에서의 정책 공조 ⑪ G20, APEC 등 다자포럼장에서의 협력
제3부분: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	① 환경보호 관련 국제협약 지지 ② '10대 우선환경분야에 대한 3국 공동 행동계획 이행 지지 ③ 생물다양성협약 총회(2010) 및 세계자연보존총회(2012) 개최 지지 ④ 역내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협력 강화 ⑤ 황사 모니터링 방법론, 예방기술,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 강화 ⑥ 유해 폐기물에 관한 협력 강화 ⑦ 한·일·중 순환경제 모델기지 구축 모색

표 1. 계속

부분	주요 내용
제4부분: 인적·문화적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	① 인적 교류 확대·발전을 통해 3국 간 우호 강화 ② 문화장관회의를 통한 협력 강화, 한·일·중 문화산업 포럼 매년 개최 ③ 3국 간 인적 왕래 규모 대폭 확대 ④ 학점인정제도 및 공동학위과정 등 대학 간 교류프로그램 활성화 ⑤ 청소년 교류규모 확대 ⑥ 스포츠분야 협력 강화 ⑦ 사회취약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3국 간 교류와 협력 강화
제5부분: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	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② 테러 근절을 위한 3국 간 전문가회의 개최 ③ 역내 마약 퇴치를 위한 협력 강화 ④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정보 교환 ⑤ 전염병 대응 관련 협력분야 발굴 ⑥ 각국의 질병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관련정보 지속 공유 ⑦ 지속가능한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해 3국 간 협력 지속 ⑧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해 ASEAN+3, EAS 등 다양한 지역협력체에서의 3국 간 협력 강화 ⑨ UN 개혁을 위한 노력 강화 ⑩ 한·일·중 대 아프리카 정책대화 3국 간 윤번제 개최 지속

- 각종 무역장벽 제거 및 무역원활화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3국 간 무역량을 확대한다고 명시하면서, 한·중·일 물류 장관회의의 적극적인 활용, 세관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였음.

- 또한 3국이 역내 및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G20, APEC과 같은 다자포럼의 장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함.

■ 제3부분은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에 관한 내용임.

-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P15) 및 제5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(CMP5)의 결과 및 코펜하겐 합의를 지지한다고 표명함.

-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우선환경협력 분야를 나열하고,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함.

- 또한 해양쓰레기 배출 감축, 황사 예방 및 대응능력 배양, 유해 폐기물 관리 등을 위한 협력 강화도 강조되었음.

■ 제4부분은 3국 간 화합과 우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·문화적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임.

-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3국 국민들의 신뢰와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,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국 문화장관회의, 한·일·중 문화산업 포럼 등의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·강화시키기로 함.

- 3국 대학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,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관회의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고,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교류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함.

■ 제5부분은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임.

-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과정을 통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고, 역내 테러 근절을 위한 3국 간 전문가회의 개최, 마약퇴치, 전염병 및 악성 질병 대응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.

-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해 ASEAN+3, EAS, ARF,

■ 제1부분은 3국 간 동반적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고 강화한다는 것임.

- 이를 위해 현존하는 정부 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3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,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3국 간 협력 사무국을 2011년에 한국 내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됨.

- 이와 더불어 안보 강화를 위한 '3국 국방대화' 개설을 모색하고, 치안당국 간 협력체 구축 및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지원 등이 제시되었음.

■ 제2부분은 3국의 공동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임.

- 먼저 2010년 개시된 한·일·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2년까지 마무리하고, 한·일·중 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밝혔음.

APEC 등 다양한 지역협력체와의 공조를 촉구하고, 아프리카의 평화와 발전을 돕기 위한 한·중·일 對 아프리카 정책대화를 지속적으로 3국 간 운번제로 개최하기로 약속함.

**나. 3국 협력 사무국(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) 설립**

■ 3국 정상은 향후 3국 협력사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·일·중 3국 협력 사무국을 2001년 한국에 설립한다는 내용의 각서(Memorandum)에 서명하였음.

- 2009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 한국 발의로 상설 사무국 설치에 합의한 바 있으며, 이 회의를 계기로 개통된 사이버사무국(<http://www.tccs.asia/>)은 현재 운영 중에 있음.

■ 3국 협력 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앞으로 한·일·중 정상회의, 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3국 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것임.

- 구체적 기능으로는 ①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의 행정적·기술적 지원, ② 신규 협력사업 발굴, ③ 협력사업 평가 및 3자위원회 실적 보고서 제출, ④ 3국 협력 주요 이슈 연구, 웹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이 제시됨.

- 사무국 내 인적 구성은 사무총장 1인 및 부사무총장 2인 그리고 기타 직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며, 사무총장은 외교장관 회의에서 임명하고 한·일·중 순의 운번제로 정하기로 합의함.

- 앞으로 한국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부지를 제공 및 주선하고, 사무국 운영 상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기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음.

**다. 신규 협력사업 발굴**

■ 3국 정상은 새로운 성장동력분야에서 협력의 일환으로 「표준협력 공동성명」 및 「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」을 채택하였음.

- 「표준협력 공동성명」에서는 3국 간 표준협력은 역내 무역 촉진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, ① 국제표준 공동개발을 위한 공동표준화 연구, ② 동북아시아의 공동표준화 촉진을 위한 '동북아 표준협력 포럼' 적극 활용, ③

표준 및 적합성평가를 통한 무역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협력분야로 제시하였음.

- 「과학혁신 협력 강화 공동성명」에서는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이 경제발전과 3국 협력 심화에 필수적 요소임을 감안, 3국 공동관심분야의 이익을 창출할 새로운 협력분야를 제시하였음.

- 제시된 협력분야는 ① 공동연구협력프로그램(JRCP) 및 A3 Foresight Program을 위한 재정적 지원 지속 및 새로운 공동기금 마련, ② 전염병 통제, 임상연구,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강화, ③ 오염방지 및 관리, 유해폐기물 처리기술 등 관련 교류협력 강화, ④ 센터네트워크, 4G 이동통신 기준, 인터넷 보안 협력 심화, ⑤ 동북아시아의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임.

■ 미래지향적 3국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·일·중 3국은 신규 협력사업을 제시하였음.

- 총 7건으로 ① 고용·노동 분야 협의체 구축, ② 치안협의체 구축, ③ CAMPUS Asia 시범사업, ④ 공무원 교환 방문사업, ⑤ 녹색경제세미나, ⑥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, ⑦ 3국 외교관 단기연수사업 등임.

표 2. 신규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

신규 협력 사업 (제안국가)	주요내용
한·일·중 노동·고용분야 협의체 구축 (한국)	- 3국의 고용·노동정책 현안 대응 경험 등 공동관심사 논의 • 청년실업대책, 녹색일자리창출사업, 사회적 기업(일자리)정책, 고용위기 극복대책(일자리 나누기 등), 노사관계정책 등 - 정책담당자 등 인적 교류 및 훈련 추진
한·일·중 치안협의체 구축 (한국)	- 집회시위관리기법, 테러조직 동향 정보 교환 및 대테러 협력체제 구축, 마약·조직·폭력·여권·밀매 등 국제범죄 근절 공동대응방안, 사이버 교류협력채널, 선진 방범시스템 상호전수 등 논의
CAMPUS Asia 시범사업 (한국)	- 한·일·중 3국의 주요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과정을 시범 운영 - 우수학생 교류를 위한 한·일·중 3국 공동장학기금 조성

표 2. 계속

신규 협력 사업 (제안국가)	주요내용
한·일·중 공무원 교환 방문사업 (중국)	- 3국 협력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(국가 별 10명)가 각국 3~4일간 순회하며 3 국 협력 관계부처 방문, 협력사업 관 련 현장학습, 비공식세미나 개최 및 시찰 등 활동에 참여
한·일·중 녹색경제세미나 (중국)	- 3국 녹색경제 발전에 대한 기회와 도 전, 동북아 녹색경제 관련 잠재적 영 향 및 추진 동향, 3국 간 환경협력 관 련 전망 및 제안 등을 주제로, 녹색경 제 관련 기본이론, 정책 등 논의
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 (중국)	- '한·일·중 순환경제 시범단지' 의 기본개념, 구조, 기능 및 운영 등을 위한 고위급 포럼 및 회의 개최(2010 년 7월 말, 베이징) • 의제(안): 동북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모색, 시범단지 구축 관련 3국의 순환경제 정책 및 사례 • 순환경제 시범단지 추진 협의체 관련 MOU 체결 추진
3국 외교관 단기연수 사업(일본)	- 한·중 외교관 각국 1명씩 초청, 1~2 주간 일본 연수 추진

## 라.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논의

■ 3국 정상은 3월 26일 발생한 한국 해군선박 천안함의 침몰사태에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,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, 이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기로 합의함.

-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이 수행한 공동 조사와 각국의 반응을 중요시한다고 표명하였음.
- 또한 비핵화된 한반도가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, 안보, 경제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,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6자회담 과정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.

■ 이밖에도 3국 정상은 세계경제에서의 3국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함.

-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일본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함.

## 4. 평가 및 향후 과제

■ 금번 정상회의의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한·일·중 3국 협력 사무국을 2011년 중 한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제도화 수준이 낮았던 동북아 경제통합과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임.

- 3국 협력 사무국 구축은 ASEAN+3 체제에서 벗어난 명실상부한 '동북아' 지역협력체를 상징하며, 이를 바탕으로 3국 간의 주체적인 협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임.

- 현재 협력 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3국 간 협력사업 조정 및 관리로 제한되어 있지만, 앞으로 EU 집행위원회와 같은 참여국 정책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은 초국가적 집행기구로 발전되어야 함.

- 이와 같은 초국가적 집행기구는 한·일·중 3국 간 이해조정과 시장 실패방지를 위한 기체로 작용하면서 지역통합을 가속화할 것임.

■ 2010년을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로 지정하면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 및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.

- 금번 회의에서 채택된 「3국협력 VISION 2020」은 지난 1~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던 「한·중·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」, 「한·중·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」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한·중·일 3국이 지역협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.

- 그러나 「3국 협력 VISION 2020」의 일부 내용은 협력을 강화한다는 담론적 내용만 열거할 뿐, 구체적 목표 및 실현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.

- 예를 들어 2020년까지 단순히 3국 간 무역량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,

- 한·일·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역시 2012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명시하였으나 한·중·일 FTA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고,

- 한·중·일 투자협정의 경우도 3국이 체결을 위해 공동으로

노력한다는 약속뿐 목표체결시점은 정하지 못했다.

- 지난 2002년 동아시아 비전그룹(EAVG: East Asia Vision Group)이 제시한 ASEAN+3 차원의 26개 협력사업도 당시에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, 협력의제 및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각국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.

- 따라서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별 실무그룹(working group)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현방법을 차기 정상회의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.

■ 또한 2011년 중 한국에 개설 예정인 3국 협력 사무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도 이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함.

- 우선 「3국 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」에 명시된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한 업무 분담 및 조정을 체계화해야 함.

- 각 협력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고 협력기반을 3국 정부뿐 아니라 민간, 학계 등으로 확대하여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임.

- 또한 이 3국 협력사무국이 한국에 개설되기로 한 만큼 앞으로 한국은 3국 간 협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통합의 촉진자(facilitator)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.

■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·일·중의 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, 한·일·중 정상회의를 통해 동아시아지역통합의 방향과 관련한 3국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3국이 공동으로 역내 통합을 이끌어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.

- 앞으로 한·일·중 정상회의가 지속되고 협력의 제도화가 강화될수록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한·일·중 3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.

- 현재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중·일 간의 치열한 경쟁 하에 ASEAN+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: East Asia Summit)로 통합되지 않은 두 개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.

- 두 개의 별도 협력체를 운영하는 데 소모되는 행정적 비용 및 역내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역통합의 지연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3국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3국 간의 입장차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.

■ 중장기적으로 한일중 정상회의는 경제·금융 협력의 기능과 외교·안보 협력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Track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실제로 한·일·중 3국의 경제·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었음.

- 그러나 북핵문제, 3국 간 정치·경제 체제의 차이, 역사인식의 문제와 같은 외교안보적 측면의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3국 간 협력의 추진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음.

- 따라서 경제·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·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긴밀한 협력 및 정책공조를 추진하여, 이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시아지역통합체로 발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. KIEP